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드려요”

서울시, 1000명→7500명 지급 확대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 규모를 기존 1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지난해 1387명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8000명을 넘어섰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노인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준다.

교통카드 375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고령자순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3750장은 면허 반납 후 신청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

서를 제출한 노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면허반납 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를 통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경북서 일할 서울청년 50명 모집

월 급여 220만원에 복리후생 제공

서울시와 경상북도는 안동, 청송, 상주, 예천, 문경에서 6개월간 일할 서울 청년 5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정경북 프로젝트’는 경북 5개 지역에 있는 21개 기업에서 청년들이 반년간 근무하며 직무경험을 쌓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역량교육을 받는 사업이다.

이들은 주 4일(주 32시간) 근무와 1일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된다. 월 220만원의 급여와 기업별 복리후생제도를 제공받는다. 복리후생제도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 기업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지역기업 내 직무활동에 필요한 직무역량강화 및 지역안착 수습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270여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멘토단(사회적기업, 법조, 의료, 교육, 마케팅 등)을 통해

직업·직무의 취업상담부터 자아탐색 등을 위한 일대일, 소그룹, 단체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지역사업가, 농·어업 전문종사자,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알아가는 커뮤니티 활동도 전개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다. 참가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정경북 프로젝트가 서울청년에게는 지역을 이해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교류의 경험을 얻는 기회가 되고, 지역에는 서울청년의 젊음과 아이디어로 경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윈-윈(win-win) 프로젝트로 자리 잡아 진정한 지역상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아동돌봄 책읽기. /경기도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본격 시동

아동돌봄공동체 등 사업 운영

민선7기 경기도가 아동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 중인 ‘아동돌봄공동체’,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르면 7월 중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선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은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진행된다.

도는 앞서 2월 공모를 통해 아동돌봄공동체 11곳을 모집했다. 현재 공동체 운영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워크숍이 3회씩 진행 중이며, 7월

중 돌봄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돌봄 공간은 한 달여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 모집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9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공간에서는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안전관리교육(심폐소생술 교육) 등 기본교육 실시와 긴급·일시 돌봄, 육아휴먼, 등·하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는 2022년까지 7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민선7기 이재명號 출범 1년

경기도민 60% “운영 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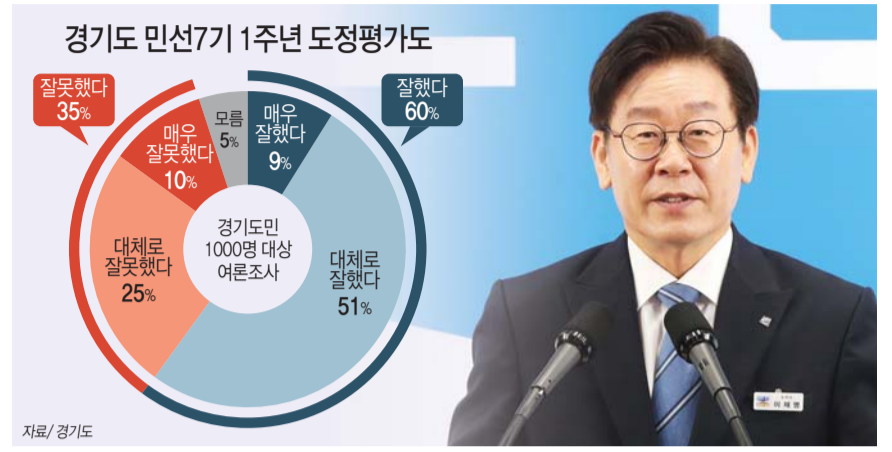
도정현안 여론조사 실시 ‘24시 닥터헬기 사업’ 높은 점수 70% “향후 지금보다 잘할 것”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출범 1년을 맞은 민선7기 이재명호에 “잘했다” (60%)는 비교적 후한 점수로 긍정평가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 1주년 도정 운영에 대한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연령 전 권역에 걸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도민 10명 중 7명이 ‘지금보다 잘할 것’ (70%)이라고 응답, 민선7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민선7기 2년차의 역점 정책 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2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경제·일자리 정책(16%) ▲교통 정책(12%) ▲환경 정책(10%) ▲부동산 정책(1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민선 7기 첫 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24시 닥터헬기 사업’으로, 전문 응급 의료 장비를 장착한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운영에 도민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체납관리단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산후조리비 지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도민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정책인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수도권순환도로 명칭 개정 등의 사업도 65%~79%에 달하는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 발행하기 시작한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9%가 긍정평가를 했고, 35%는 부정평가, 모름 또는 무응답은 15%로 조사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서울 예산편성 과정 시민들 참여 확대

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내용 골자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가결

서울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크고 작은 부침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재석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4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원회) 구성은 박원순 시장이 민선 7기 역점 추진하는 공약으로 시민-행정-의회가 서울시정을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정진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시의원들은 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의석 110석 중 102석이 여당인 상황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시는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뒤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6월 2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이날 회의는 10시에 개의회 예정이었으나 조례안 담당 상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30분 늦게 시작했다. 안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정진술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청해 전자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잠시 전운이 감도는 듯 했지만 조례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 민주주의위원회는 내년에는 6000억원, 2021년에는 1조원의 예산 속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1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총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며 “시 예산은 시정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서 편성한다. 시민들은 예산 편성 절차에서 속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박 시장이 민주주의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위촉·임명하게 되면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한다. /김현정 기자 hik1@

마곡산단 빈 사무실 벤처기업에 무상제공

서울시, 최대 5년간... 벤처 모집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내에 있는 빈 사무실을 벤처기업에 연구공간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최대 5년간 무료로 쓸 수 있다.

시는 공실을 제공하는 기업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연구공간 공유제’와 서울시가 입주기업을 뽑는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사업을 통해 벤처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이달 중 연구공간을 무상 제공할 기업을 선정한다. 다음 달 공실을 쓸 벤처기업을 선정해 9월까지 입주국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 가능한 기업은 24~28개사다.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은 8월 중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입주 공간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돼 5년간 약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마곡산업단지 내 중공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공실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조성한 마곡산업단지에는 현재 대기업 33개사와 중소기업 36개사가 입주해 있다. 오는 2024년까지 80여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